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5-12호 / 2005년 4월 25일 발간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작성자: 김홍중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장

【hckim@kiep.go.kr, ☎ 3460-1036】

김군대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

【ktkim@kiep.go.kr, ☎ 3460-1064】

主要內容

- 유럽 최대경제대국인 독일경제가 2000년 이후 성장률의 정체, 고실업, 내수 부진 등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음.
 - 2001~04년 평균 성장률은 0.65%에 불과하며 실업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함. 2003년 현재 독일의 1인당 소득은 남유럽국을 제외한 유럽주요국 중 최하위임.
- 독일경제의 부진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유산과 잘못된 총수요관리정책,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계화와 통일의 충격으로 표면화된 것으로 평가됨.
- 독일경제의 침체는 경쟁원칙의 중요성, 신성장산업의 육성 필요, 투자환경의 개선, 정교한 통일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함.
 - 경쟁원칙: 세계화시대에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는 필연적으로 제조업 공동화를 유발함. 사회적 형평성이 경쟁원칙을 훼손하면 구조적 문제에 봉착함. 경쟁원칙은 투자환경의 개선에 도움을 줌.
 - 신성장산업 육성: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도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통일정책: 자생력있는 경제의 육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함. 정부의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은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어 내수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로 이어짐.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 독일경제 최근 동향

□ 독일 경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처해 있으며 2005년에도 강한 회복의 조짐은 찾아볼 수 없음.

- 독일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0.3%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0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0.1%)을 기록하였음.
- 이후 2003년 3/4분기부터 경기가 약간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타 EU 회원국에 비해서는 아직 그 회복세가 미약한 편임. 2004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고실업에 따른 내수침체로 인해 전기대비 -0.2%로 3/4분기 0.0%에 이어 소폭 하락하여 경기후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4월 4일 EU집행위는 2005년 독일의 성장률이 당초 예상치인 1.5%의 절반 수준인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함.

<표 1> 독일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연간	Q1	Q2	Q3	Q4
EU	3.7	1.8	1.1	1.0	2.2	2.0 (0.8)	2.5 (0.6)	2.2 (0.3)	2.1 (0.3)
프랑스	4.2	2.1	1.1	0.6	2.1	1.8 (0.7)	2.9 (0.7)	1.9 (0.0)	1.8 (0.8)
독일	3.1	1.0	0.1	-0.1	1.6	0.8 (0.5)	1.4 (0.4)	1.3 (0.0)	1.1 (-0.2)

주: 분기별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임.

() 안은 전기 대비임.

자료: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February 2005.

Eurostat. *Euro-indicators*. March 2005.

□ 최근 독일 경제의 성장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는 여전히 침체되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됨.

- 독일의 수출은 2004년 10.2%나 증가하였지만, 내수부문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민간소비와 투자 부문의 위축은 두드러져 민간소비의 경우, 2001년부터 점차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 후, 2003~04년 2년 연속으로 0% 성장하는데 그쳤음.
- 민간소비는 실업증가와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따른 사회복지혜택이 줄어들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또한 세금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사회보장관련 지출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2003년 4/4분기 이후 사회 인프라 투자와 같은 정부소비 증가율도 미미한 상태임.

<표 2> 주요 경제지표 변화율

(단위: %)

	2001	2002	2003	2004
실질GDP	0.8	0.1	-0.1	1.6
민간소비	1.7	-0.7	0.0	0.0
정부소비	1.0	1.9	0.1	-0.1
투 자	-3.6	-7.2	-0.9	-0.2
(국내수요)	-0.8	-1.9	0.5	0.2
수 출	5.7	4.1	1.8	10.2
수 입	1.0	-1.6	4.0	6.8

주: 2004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Oxford Analytica(2004.12.17)

-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0년 7.2%, 2003년 9.0%, 다소 경기를 회복했던 2004년에도 9.5%까지 상승하였음.
- 실업률의 경우 증가 추세를 이어나가 11월에는 10.8%를 기록하여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함. 2005년 1월 독일은 실업자 수 500만 명을 돌파하였음.

<표 3> 독일의 고용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전년대비)

	2002	2003	2003 4/4	2004					
				1/4	2/4	3/4	9월	10월	11월
취업자수	38,699	38,316	38,291	38,305	38,371	38,390	38,391	-	-
취업률	-0.6	-1.0	-0.5	-0.2	0.2	0.3	0.3	-	-
실업자수	4,075	4,383	4,367	4,301	4,371	4,417	4,445	4,457	4,464
실업률	9.8	10.5	10.5	10.3	10.5	10.6	10.7	10.7	10.8
서독지역	7.7	8.4	8.4	8.3	8.4	8.6	8.6	8.6	8.6
동독지역	17.7	18.5	18.4	18.0	18.4	18.6	18.7	18.7	18.8

자료: 독일연방은행, Eurostat.

2. 독일 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

□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고성장을 달성하며 유럽의 최대경제대국으로 도약한 독일경제는 1990년대 초까지 유럽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해 왔음.

- 1950~60년대 매년 5~10%의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함.
- 그 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주기적인 불황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1960년대에는 4%대, 1970년대 3%대, 80년대 2%대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음. 특히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까지 독일 경제는 두 번째로 긴 장기 호황을 경험함.
- 독일은 기술 교육을 중시하는 기술 강국으로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기계 등 제조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Made in Germany)을 확보하였음.

□ 1990년 초반 이후 독일경제는 점차 역동성을 잃고, 경제적 위상도 약화됨.

- 1990년까지 독일의 1인당 GDP는 EU 15개 회원국의 평균치를 20%이상 상회하였으며, EU의 경제대국인 프랑스 및 영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었음(<표 4> 참고).

-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됨. 2003년 독일의 1인당 GDP는 EU15 평균치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15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표 4> 독일 1인당 GDP의 변화

(EU15개국 평균치=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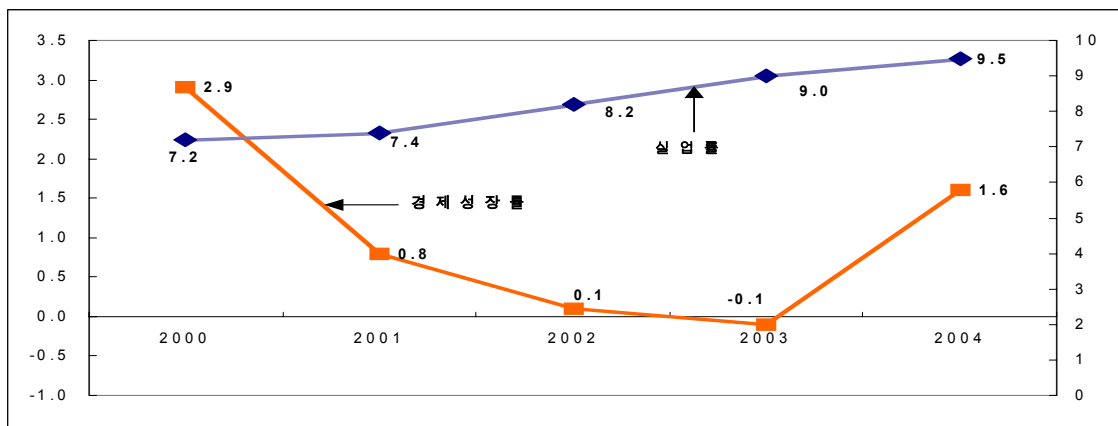
EU15	1990년	2003년	EU15
룩셈부르크	149.6	188.7	룩셈부르크
스웨덴	141.4	130.5	덴마크
핀란드	138.1	126.1	아일랜드
덴마크	132.3	110.2	스웨덴
독 일	123.2	104.1	네덜란드
프랑스	109.3	103.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03.8	102.4	핀란드
벨기에	100.8	98.9	영 국
네덜란드	100.5	96.4	프랑스
이탈리아	99.0	96.3	벨기에
영 국	87.5	95.5	독 일
아일랜드	68.9	83.3	이탈리아
스페인	66.9	67.6	스페인
그리스	42.5	50.8	그리스
포르투갈	36.3	46.2	포르투갈

주: 해당연도의 EU 15개 회원국의 1인당 GDP 평균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각 회원국 수준
 자료: Global Insight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2000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성장, 고실업이라는 전형적인 경기침체 양상을 띠게 됨.

<그림 1> 독일의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단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3.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

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유산과 잘못된 총수요관리정책

□ 2차 대전 후 독일형 경제발전 모형의 근간이 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 대안으로 주창되었음.

- 19세기 후반 독일경제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카르텔을 통한 소수의 경제력 집중은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더욱 심화되어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를 완성함.¹⁾

- 독과점체제의 만연과 국가의 시장개입 확대, 정치권력과 독점자본과의 유착은 독일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나찌의 전쟁도발로 이어져 큰 폐단을 낳게 됨.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²⁾는 이러한 독일경제사에서 나타난 폐해에 대한 반향에서 나온 것임.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쟁규칙을 제시하고 경쟁을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함.

- 1차적인 자원배분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시장실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분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국민의 최소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전후 독일 경제의 번영을 가져 온 체제로서 모든 독일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었음.

□ 1970년대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 의한 2차 분배는 문제를 야기

1) 민족적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산업의 독과점 체제가 통제하기 더 용이하며,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독과점 산업을 더욱 장려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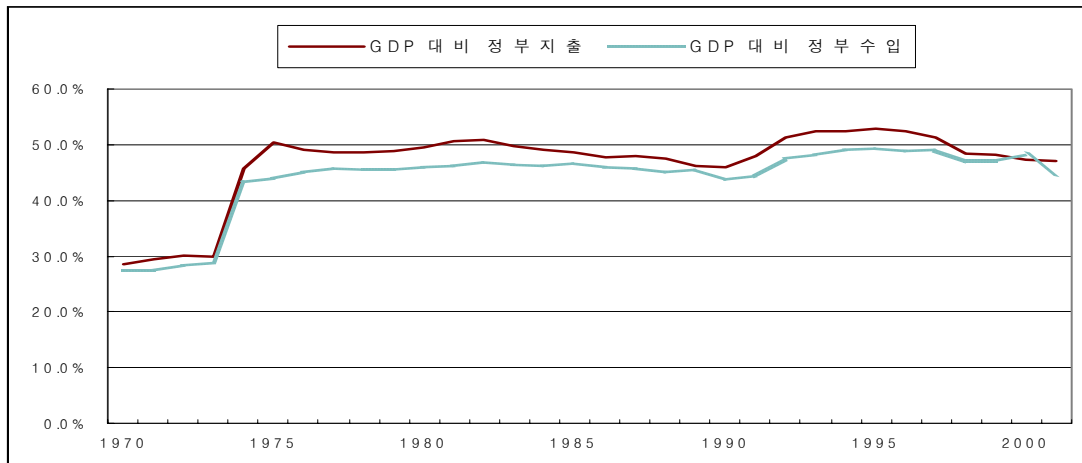
2) 1930년대 발터 오이켄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부르크 학파(Freiburg school)에 의해 주창된 질서 자유주의(Ordo-Liberalismus)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전후 경제재건과 고도성장을 이루게 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이론적 근간이 되었음.

함.

-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경제성과 배분에 대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누적되자, 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따라 의료 및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게 됨.
-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1970년 28.5%였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1975년에는 50.3%까지 갑자기 증가하였음 (<그림 2> 참조).

<그림 2> 정부재정 추이

(GDP 대비, %)



자료: 독일연방통계청

- 한번 상향 조정된 정부 재정지출 및 사회복지지출액은 경기 하강시에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더욱 확대시켰음.

<표 5> 재정지출 추이

(GDP 대비, %)

	1991	1994	1997	2000
정부지출	47.1	49.0	49.3	45.9
- 사회보장지출	26.2	28.9	30.6	29.7
- 임금	9.0	9.0	8.7	8.1
- 투자	2.7	2.7	1.9	1.9
재정적자	-2.9	-2.4	-2.7	-1.3
정부부채	40.4	49.4	61.0	60.3

자료: EU 집행위원회(2002)

-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은 높은 수준(GDP의 50% 내외)을 유지하였으며, 1991년 GDP의 26.2%였던 사회보장지출액도 2000년 29.7%까지 상승하였음.

□ 한편, 이해집단의 요구에 부응한 정부가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이 훼손됨.

- 즉 경제호황이란 성과를 사회복지 확대로 연결시켜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인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경쟁에 의한 성장 등의 요소가 점차 축소되어 경제의 활력이 상실됨.

- 또한 경기불황기라고 해서 한 번 높아진 복지수준이 다시 축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하강기에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가중되고 이는 다시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민간소비와 투자의 위축을 유발하게 됨.

- 경기침체기에도 독일의 역대 집권당은 국민들의 저항이 큰 구조개혁보다는 확대 재정정책 등의 충수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됨.

- 확대재정정책 추진으로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이루지만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를 다시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됨.

- 독일은 정부지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정부지출 비중이 전체 GDP의 약 50%에 유지되었음(<표 5> 참고).

-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미국은 33.8%(1985년)→29.5%(2000년)로, 영국은 44.4%(1985년)→39.1%(2000년)로 점차 축소되었음.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기업과 노동자의 세금부담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산업입지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음.

- 독일의 세금 및 사회보장세 부담도 정부지출 비중과 같이 미국(28.9%)이나 영국(37.1%)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임.

<표 6> 세금 및 사회보장세 부담 비교(2003년 기준)

(GDP 대비, %)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세금 및 사회보장세	41.7	45.7	37.1	39.3	28.9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결국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인 경쟁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추진했을 때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나, 정부의 영역이 사적 시장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이 떨어짐.

-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인 경제구조개혁 대신 단기적인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부문이 비대해졌고, 효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의 작동하지 않게 됨.

-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조세부담률 확대가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더욱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계화와 통일 등 외부적 충격은 경직적 경제체제의 부작용을 극대화시켰음.

- 통일 이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운용은 독일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직면하게 된 핵심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함.

나.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

- 독일의 노동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타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임.

- 독일(서독) 제조업 부문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2002년 기준으로 26.26유로로, 미국(22.43유로), 일본(20.18유로), 영국(19.9유로), 프랑스(19.5유로) 등보다 높으며, 불가리아의 20배, 라트비아의 10배, 폴란드의 5배, 슬로베니

아의 3배에 달하고 있음.

□ 반면, 독일의 노동시간은 최저수준으로 독일의 노동생산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서독의 1년 노동시간은 1,342시간으로 미국(1,777시간), 일본(1,828시간), 영국(1,652시간), 프랑스(1,453시간)보다 작음.³⁾

<표 7> 주요국별 연간 노동시간

	독일(서독)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미국	한국
노동시간	1,342	1,453	1,652	1,523	1,745	1,828	1,777	2,390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 2002년말 기준으로 미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보았을 때, 독일은 80% 수준에 불과하고, 프랑스(88%), 이탈리아(94%)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노동시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높은 노동비용은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됨.

- 독일의 노동시장은 고용보호, 노동계약, 임금결정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미국, 영국 등 경쟁국에 비해 유연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음.
 - OECD가 각국의 고용보호법(EPL)에 의한 보호수준을 수치화한 고용보호법지수를 보면 독일은 2.8로 미국(0.2), 영국(0.5)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아일랜드(1.0), 벨기에(2.1), 핀란드(2.1) 등 여타 EU 회원국들보다 높은 수준임.

□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해외 이전 및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연결되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촉진함.

-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금 및 노동비용 부담, 짧은 근로시간 및 낮은

3) 최근에는 독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멘스(Siemens),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 오펔(Opel), 폭스바겐(Volkswagen) 등 주요 기업의 노사가 임금동결 및 노동시간 연장(주당 35시간→40시간 이상)에 합의한 바 있음.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중·동구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중간재 수입을 늘림.

-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독일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해외에 서만 400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있음.
-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독일의 주요 수출산업의 중간재 수입비중이 확대되었음.

<표 8> 중간재 수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1년	1995년	2000년	2002년
중간재수입 비중	26.7	29.7	38.1	38.8

자료: Deutsch Bank

□ 독일의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실업의 증가 및 장기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짐.

-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호황일 때는 실업률이 별로 낮아지지 않는 반면, 외부의 부정적 충격이 있을 경우 실업률은 크게 올라 실업률이 계단식으로(stepwise) 올라가는 경향을 보임.

- 2000~03년 평균 장기실업률의 경우 독일은 4.2%로서 미국(0.4%)이나 영국(1.3%)을 훨씬 상회함.

- 실업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조세확대가 유발되어 이는 기업투자 위축, 근로자의 의욕상실 및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져 실업증가에 따른 내수위축을 더욱 가중시킴.

다. 통일정책의 문제점

□ 동서독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통독 이후 매년 독일 GDP의 약 4~4.5%를 동독지역에 지원4)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함.

- 동서독간의 경제력 격차는 여전한 가운데,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으로 서독경제의 침체는 가중되고 있음.

<표 9> 동서독 경제력 격차(서독=100)

	1991년	2002년
1인당 GDP	33	63
노동자 1인당 비용	49	77
실업률	216	254

자료: Oxford Analytica(2004.9)

- 독일정부는 늘어나는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991년 4월 이후 증세조치를 수차례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통일비용의 부담증가는 서독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켰음.

- 또한 통일비용의 증가로 대규모 통화증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독일연방은행은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었음.

□ 잘못된 화폐전환율은 동독지역의 산업공동화를 불러와 동독경제의 서독의존도를 심화시킴.

- 독일 통일 시 구동독화폐의 가치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인정해줌으로써 경제력에 맞지 않는 구 동독화폐의 실질 절상을 가져왔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구 동독주민의 구매력 증가가 있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수많은 동독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음.

□ 사회복지와 노동정책 등에서 서독 사회경제시스템의 성급한 동독으로의 이식은 동독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기존 서독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기본원칙이 그대로 동독에도 적용됨으로써 과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임금상승은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제조업 붕괴와 실업을 유발하였음.

4) 2000년 통계에 따르면, 약 1천 2천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이 소요되었음.

- 또한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도 그대로 동독에 적용되어, 동독지역의 제조업 붕괴에 따른 실업증가로 막대한 사회보장비(실업급여)가 동독지역에 소요 됨.
- 경제발전단계가 동독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서독경제에서조차 이미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정부재정의 악화와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특히 동독지역의 급격한 임금상승은 동독지역의 투자 유치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동독은 중동구권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남으로써 기업들이 동독지역 투자를 기피하게 되었으며, 이는 더욱 동독지역의 실업을 가중시킴.
- 결국, 동독의 산업기지화가 실패하고 서독 경제시스템이 동독에 전면 도입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지출, 서독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킨 것이 독일 경기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4. 평가

- 독일경제의 침체는 장단기적 요인, 수요·공급측 요인이 모두 중첩되어 나타난 현상임.
- 과도한 사회복지정책, 노동시장을 비롯한 과도한 시장규제로 인해 경제체질이 악화된 가운데 통일로 인한 과도한 부담, 세계화, 중·동구 경제의 편입,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총수요부문의 위축이 중첩되어 나타난 것임.
- 따라서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의 개선과 함께 총수요 관리정책을 펴야 하나 통화금융정책의 자율성 제약, 안정성장협약으로 인한 재정정책의 제약으로 단기적인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경제체질의 개선에 보다 주력해야 할 상황임.

- 더욱이 수출의 호조 속에서도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은 경기 불황이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는 경제개혁프로그램 ‘Agenda 2010’⁵⁾은 독일연방과 지방정부와의 이해관계, 정당간의 세력관계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리더십 부재의 문제를 겪고 있음.

- Agendad 2010은 현재 독일 경제 침체의 구조적 문제점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보장제도 개혁, 세율 인하 및 세제 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슈뢰더 정부는 현재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단기적 충수요확대 정책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있으며 권력구조의 난맥상으로 인한 리더십 부재의 문제를 겪고 있음.

□ 향후 구조개혁의 성패는 위기상황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음.

-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 있음.
- 단기적으로 독일 경제의 회복은 독일 정부의 최소한의 재정 자율성의 확보, 세계 경기의 회복, 석유 등 천연자원의 가격 안정, 유로화 환율 등에 의해 좌우될 것임.

5. 시사점

□ 개방 경제체제에서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는 필연적으로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함.

- 독일 경제는 전반적인 세계화 추세, EU의 심화, 중·동구 회원국의 가입 등으로 많은 경쟁의 압력을 받고 있는바, 노동시장의 규제는 제조업의 해외 이탈로 나타남.

5) 2003년 12월, 의회에서 관련법안 통과 후, 추진 일정에 따라 시행 중에 있음.

- 이를 방지하려면 이민을 포함한 영미식의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유연화나, 고도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가능하나, 현재 독일은 그 어느 것에도 성공적이지 못함.

□ 고도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시대적인 대세임.

- 독일은 제조업 강국의 전통뿐만 아니라, 노동규제, 과도한 시장규제로 인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법률, 교육, 의료 산업의 상대적 우위가 상실되면서 관련 산업의 국내시장까지 해외로 넘겨주고 있는 실정임.
- 고도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함.

□ 경쟁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추진되었을 때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만, 경쟁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구조적 문제를 낳게 됨.

- 독일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경제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지만, 그 후 이해집단의 이해에 이끌려 경제모델의 기본원칙들이 점차 훼손되면서 현재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통스런 구조개혁을 경험하고 있음.
- 고도성장기에 한 번 상향조정된 복지정책은 경기가 하락한다고 해서 축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은 지양되어야 함.
- 역대 독일 정권들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의 저항이 높은 구조개혁 대신 단기적인 총수요확대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는 다시 구조적 문제점의 누적과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 국내투자 환경의 개선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보정하는 수단으로 기

능함.

- 독일은 수출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고용환경과 고임금 때문에 수출확대가 국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았음.

- o 독일의 불리한 노동시장 환경으로,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대신 해외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내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장기실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켰고, 기업의 투자위축과 더불어 내수가 침체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경제권과의 통합은 그 지역의 자생력 확보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동독경제의 실패는 임금수준에 맞는 동독의 수출산업 육성 및 이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체계적인 실행 부족에 기인함.

- 동독지역의 자생력이 약화되자 서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서독주민들에게 이전, 이는 서독의 내수위축과 독일 전체의 경기침체를 낳게 하였음.